



성명서

2022. 3. 5 (토)
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(문의) 02-784-9862

尹 장모, 연 600% 고리사채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판시되었는데 형사처벌 면한 것에 윤석열 후보 개입했는지 밝혀라

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 안 모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서, 최 씨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한달에 50%, 연 환산 600%에 달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.

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다. 그간 국민의힘은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할 뿐, 얼마를 어떻게 빌려준 것인지 극구 감추어 왔고, 금번에 관련 판결문으로 구체적인 대여조건, 즉, 현행법인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.

하지만, 국민의힘은 장모 최 씨의 명백한 형사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‘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’는 한결같은 해명을 내놓았다.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를 손해보았다는 것인가. 연환산 600%의 이자를 모두 다 받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? 장모 최 씨는 매번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정작 판결문에 의하면 40억원에 매수한 땅이 130억원에 팔렸다. 90억원 전매차익은 모두 하늘로 날라갔다는 것인가.

긴말이 필요없다. 구구절절 엉터리 해명할 것이 아니라,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월 50% 이자로 빌려준 사실이 맞는지,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,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을 받았는지, 왜 검찰은 동업자만 기소하고 장모 최 씨는 고리 사채를 해도, 잔고증명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라.

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연 600%의 불법 고리사채를 한 정황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판시되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면한 것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.

2022년 3월 5일

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